국 제 수 산 월 간 동 향

2026. 10.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목 차

1. EU, 대서양 · 인도양 열대참치 자원평가 기반 강화 ····· 3

2. 인니, 어선 현대화에 130억 달러 투자해 4,582척 무상 공급 추진 ····· 4

3. MSC 신규 재무 모델, 관리된 어업의 가치를 입증 ····· 5

4. 포클랜드 주변 불법 조업 논란, 수산기업 소송 위험 커져 ····· 8

1 EU, 대서양 · 인도양 열대참치 자원평가 기반 강화

□ **유럽연합(EU)의 지원으로 대서양과 인도양의 열대참치 자원평가 개선을 위해 추진된 연구사업(ITUNNES)이 종료됨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연구망과 데이터 도구를 유지하기 위한 유럽위원회의 후속 지원을 요청하였음**

○ 스페인 연구기관 AZTI가 총괄하고 유럽의 과학기관, 지역 수산당국 및 어업계가 참여했으며, 코트디부아르와 미국의 협력기관도 함께 황다랑어, 가다랑어 및 눈다랑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국제 생물학적 시료 채집망을 구축하고, 연령과 성장, 번식, 먹이생태 및 개체군 구조 등 자원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

○ 공동 데이터베이스와 생물학적 정보 조회 도구인 BioTuna Shiny App을 개발했으며, 시료 채집 전략과 절차를 수립하고 역량 강화 활동 및 향후 자료 수집을 위한 정책 권고를 마련함

○ 연구 결과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와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 작업반 및 워크숍에서 소개되기 시작했으며, 기존 과학자료와 함께 자원평가에 점진적으로 반영될 예정임

○ 참여기관들은 10월 13일 브뤼셀에서 최종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날 유럽위원회에 성과와 권고사항을 전달했으며, 원양어업자문위원회(Long Distance Advisory Council, LDAC)에서도 업계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들과 연구 결과를 논의함.

○ 참여기관들은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료 채집망과 데이터 시스템의 유지 및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존 자료 수집 체계와의 연계 및 후속 재정 지원을 유럽위원회에 요청함

※ 출처: SeafoodSource[1)]

1)https://www.seafoodsource.com/news/itunnes-project-seeking-continued-eu-support-to-sustain-tropical-tuna-research-network (‘26년 10월 30일 검색)

2 인니, 어선 현대화에 130억 달러 투자해 4,582척 무상 공급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선 현대화 사업을 통해 2029년까지 어업인에게 현대식 어선 4,582척을 무상 공급할 계획이며, 총 234조 5,500억 루피아(약 13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함**

○ 기존 1,582척 건조 계획을 4,582척으로 확대했으며, 인니 해양수산부는 재원 조달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선박을 어업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 중 1,582척은 영국과의 협력을 통해 30톤, 200톤 및 500톤급 총톤수(GT) 어선으로 건조할 예정이며, 소요 비용은 약 22억 4,000만 달러로 추산됨

- 해당 사업은 금융 지원을 확보했으며, 영국 엔지니어링 기업 밥콕 인터내셔널(Babcock International)이 참여하는 설계 및 계약 확정 절차가 진행 중임

○ 나머지 3,000척은 국영기업 PT Agrinas Jaladri Nusantara를 통해 조달할 계획으로, 30톤급부터 대형 산업어선까지 포함함

○ 약 107억 6,00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대출을 통한 재원 조달을 검토하고 있음

○ 정부는 우선 30톤급 어선 1,000척의 건조를 추진하여 연안 지역사회에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적백 어촌 조성사업(Red and White Fishing Villages initiative)' 참여 지역을 중점 대상으로 함

○ 현재 인도네시아 어선의 약 91%는 목선이며, 상당수가 적절한 냉장 및 저장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새로 공급할 강철·알루미늄 선체 어선에는 개선된 냉장 및 저장시설을 갖춰 어획 후 손실을 줄이고 어획물의 품질을 유지할 계획이며, 현대화된 선단의 연간 양륙량은 약 105만 톤, 그 가치는 약 15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

○ 인니 해양수산부는 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대통령 지침을 작성 중이며, 어선 현대화 전담반 설치를 위한 장관령을 발령함.

※ 출처: SeafoodSource[2)]

3 MSC 신규 재무 모델, 관리된 어업의 가치를 입증

■ **지속가능성과 인증이 신용 위험을 낮추고, 미관리 어업 대비 할인현금흐름(DCF)법에 따른 재무가치 평가액을 2.05배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줌**

○ 해양관리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는 은행과 금융기관에 수산업 부문의 리스크와 회복탄력성에 관한 통찰을 제공하는 시범 어업 재무 모델을 발표했다. 이 모델은 MSC 인증을 받은 적절하게 관리된 어업이 해양 환경에 긍정적일 뿐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동등한 조건의 어업보다 약 2배 높은 가치를 지니며, 장기적으로 더욱 견고한 경제 모델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수산물은 세계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주요 상품이며,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장기적인 경제적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어류 자원의 3분의 1 이상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남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회복탄력성이 높고 거버넌스가 잘 갖춰진 수산물 생산 부문으로 자본을 유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MSC 인증은 지속가능한 어업과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유통하는 공급망에 적용되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인정받는 기준이다. 이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제시한 모범 관행 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산 어획 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인증 프로그램이다.

○ 도쿄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수산물 정상회의(Sustainable Seafood Summit)의 청색금융 패널에서 발표된 MSC의 신규 어업 재무 모델은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어업이 리스크가 낮고, 시장 접근성이 더욱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높은 어획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2)https://www.seafoodsource.com/news/new-msc-finance-model-suggests-certification-sustainability-key-to-fishery-value (‘26년 10월 30일 검색)

ㅇ MSC 인증은 이러한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실사(Due Diligence) 도구다. MSC 인증을 활용하면 자연자본, 규제, 공급망 및 평판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으며, 공급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수산업 관련 리스크와 MSC 인증의 리스크 완화 효과를 일반적인 재무 모델에 반영하면 청색금융의 확대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해양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ㅇ 이러한 효과를 종합하면 할인현금흐름(Discounted Cash Flow, DCF) 모델을 통한 재무가치 평가에서 해당 어업의 가치가 약 2.05배로 증가할 수 있다.

ㅇ 또한 인증은 수산물 공급망이 복잡하고 투명성이 부족하며, 신뢰할 수 있고 표준화된 독립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금융기관의 오랜 과제에도 대응한다. 전 세계 789개 어업이 MSC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24개 어업이 MSC 인증을 획득했다. MSC 인증은 어업 자체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를 제공한다.

ㅇ MSC와 수산양식관리협의회(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ASC)의 자본시장 협력 담당 책임자인 레이 디라니(Ray Dhirani)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금융 부문에는 MSC 인증 절차가 제공하는 리스크 완화 효과를 여신 심사, 기업가치 평가, 수산물 공급망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조건 설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습니다. 공시 프레임워크가 특정 자산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한 리스크 평가로 전환되는 가운데, 금융 관계자들은 MSC 인증이 수산업 부문에서 재무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지표를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제3자 검증을 거친 어업 단위의 대리 지표(proxy)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ㅇ 적절하게 관리되는 어업의 경우, MSC의 시범 어업 재무 모델은 인증 비용이 향후 수익 증대와 장기적인 비용 절감 가능성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또한 인증을 획득하면 채무불이행률이 낮아지고 신용도가 개선되어 투자 유치와 성장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이 모델은 관련 국제 연구 및 보고서에서 도출한 가정을 바탕으로 예시적인 재무 시나리오를 구성한 것이다. 목적은 MSC 인증을 준비하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관리 개선의 효과를 할인현금흐름(DCF) 모델에 반영하는 데 있다.

- 가치 차이의 대부분은 어업 사업 자체의 성과에서 비롯된다. 구체적으로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어획량과 개선된 시장 접근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향상되는 데 기인한다. 반면 MSC 인증 취득 비용은 연간 수익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 적절하게 관리되는 어업은 해양 환경의 건강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더욱 회복탄력성 있는 경제 모델을 뒷받침한다. 이는 우수한 어업 관리 체계가 재무 성과에도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www.seafood.media[3)]

3) https://www.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l=e&id=139830&ndb=1 (2026년 10월 26일 기사)

4 포클랜드 주변 불법 조업 논란, 수산기업 소송 위험 커져

■ 아르헨티나, 스페인·영국계 어업기업 등 약 80개 개인·법인 제소...한국·대만·바누아투 기업에 대한 추가 소송도 예고

○ 포클랜드 제도(아르헨티나명 말비나스) 주변 해역의 어업권을 둘러싼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 갈등이 국제 수산업계의 법적·재정적 위험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아구스티나 레레나 재단은 2026년 10월 9일, 해당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스페인·영국계 및 아르헨티나 기업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별도의 형사 고발도 진행되면서 관련 기업의 선박 억류, 자산 동결, 어업 허가 취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아구스티나 레레나 재단은 2년간의 조사와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티에라델푸에고주 리오그란데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스페인 갈리시아 지역의 수산기업, 포클랜드 현지 합작기업, 관련 아르헨티나 기업 등이 포함됐으며, 제소 대상은 약 80개 개인·법인에 이른다.

○ 재단은 1989년부터 2025년까지 포클랜드 제도 주변에서 스페인계 선박 등이 총 410만 톤 이상의 아르헨티나 수산자원을 어획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아르헨티나의 허가 없이 이뤄진 불법 조업으로 규정하고, 환경 훼손과 수산자원 고갈뿐 아니라 국가 세수 감소, 소비자 피해 및 지역경제 발전 저해 등의 책임을 물었다.

○ 청구 금액은 어획물의 가격을 본선인도(FOB) 가격으로 평가하는지 도매가격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약 123억~265억 달러로 제시됐다. 여기에 세금과 각종 부담금, 소송 비용 및 추가 손해액도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 영국 정부의 책임과 기업의 보상 문제

○ 이번 분쟁에서 또 다른 쟁점은 포클랜드 제도 정부(FIG)가 발급한 어업 허가와 영국 중앙정부의 책임 문제다. 관련 법률 분석에서는 포클랜드 제도의 어업 허가 권한은 현지 정부에 있으며, 영국 중앙정부가 해당 허가로 발생한 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거나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됐다.

○ 이는 현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 조업한 기업이라도 아르헨티나의 법적 조치로 손실을 입었을 때 영국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법률 적용은 개별 사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선박 억류・자산 동결・어업 허가 취소 가능성

○ 아르헨티나 측은 법원에 환경 피해 복구 및 손해배상과 함께 관련 기업에 대한 가압류 등 예방적 조치를 요청했다. 소송이 진전될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선박 억류 및 압류: 국제 사법공조가 가능한 국가의 항만에서 관련 선박이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
- 기업 자산 동결: 모기업의 은행 계좌와 운송 중인 수산물 등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성
- 어업 허가 취소: 아르헨티나 본토 해역에서 관련 기업이 보유한 어업 허가와 어획할당량에 대한 제재 가능성
- 보험 및 물류 차질: 선박보험과 선주상호보험(P&I 보험)의 보장 문제, 항만 입항 및 국제 운송 과정에서의 추가 위험

○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집행될지는 법원의 판단과 국제 사법공조 절차에 달려 있다.

■ 한국・대만・바누아투 기업에 대한 추가 소송 예고

○ 재단은 현재 소송과 별도로 포클랜드 주변에서 조업하는 한국・대만・바누아투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거나 운송・해운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업체와 공급업체까지 책임 추궁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따라서 잠재적 영향은 실제 조업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선박의 소유주와 모기업은 물론, 수산물 유통업체, 물류업체, 보험사 및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도 거래 관계와 법률 적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 소송의 예고가 한국 기업의 실제 피소나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수산업계의 대응 과제

- ㅇ 이번 사안은 분쟁 해역의 조업 허가가 국제 수산물 공급망 전반의 법률·금융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 기업들은 다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조업 허가의 발급 주체와 법적 유효성
  - 선박의 조업 위치 및 수산물 원산지·어획 이력
  - 현지 합작기업과 해외 모기업 간 계약 및 책임 관계
  - 선박보험과 P&I 보험의 보장 범위
  - 국제 항만 이용, 수산물 수출입 및 물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
- ㅇ 이번 분쟁의 핵심은 포클랜드 주변 해역의 영유권 갈등이 국제 수산기업의 조업권과 자산, 보험 및 공급망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소송의 진행 상황과 국제 사법공조 여부에 따라 관련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해당 해역과 연계된 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위험 관리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출처: www.seafood.media[4)]

4) https://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monthyear=&day=18&id=139747&l=e&special=0&ndb=0 (2026년 10월 18일 기사)
https://www.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l=e&id=139794&ndb=1 (2026년 10월 22일 기사)